

## 북한의 환경 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

손기웅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의 환경 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에 이르러 사회 전반적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고, 환경 보호도 대중적 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를 이미 벗어났으며,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을 초월한 국제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는 한반도가 남북한 주민과 그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어서 남북한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직시한다면, 이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경제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지구환경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된 한반도 내 환경 오염 감시 목적의 공동 연구,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한 예보, 예방 및 조직적 대책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한 지역의 환경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등과 그외에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 동해의 구소련·러시아의 방사성 물질 투기에 대한 오염 조사,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이동성 대기 오염과 및 황사 현상 조사 등도 교류협력의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류 협력 추진 과정에서는 공식협상단보다는 국제 기구 지원 아래 기술 전문가, 관련 학자들의 남북한간 실무 접촉을 선행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 환경 오염 파괴의 실태

**북**

한은 사회주의제도에서도 주체사상을 창조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북한식 사

회주의' 제도가 인민 대중을 위한 환경 보호 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체제를 '비범한 사상 이문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으로 이끈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오늘날 북한은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다고 선전한다. 인민들은 공해라는 말조차 모르고 문화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옛선조들이 한갓 꿈으로만 생각하던 '장생 불로의 낙원'이 산 현실로 펼쳐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 말하는 '공해 없는 나라', '인민의 지상 낙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북한에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없는 것일까? 대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산림이 황폐화되고, 공기·물·토양이 오염되고 동·식물이 남획되는 등의 환경 손상이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神적인 존재였던 김일성과 김정

일이 행한, 추후도 그 진실성이 의심되어질 수 없는 그들의 말과 글 속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촬영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과 파괴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 파괴의 실태를 살펴보자. 북한에서의 산림 손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47년 김일성이 산림 조성 사업을 숱군 증적으로 벌일 것을 주장한 이후, 산림 보호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파괴는 그치지 않았다. 흔히 일제놈들이 나무를 몽땅 찍어 썼다고 욕하지만 우리도 나라의 주인이 되고나서 나무를 몽땅 찍어 썼다는, 산림 조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 나무가 깊은 산골에나 있지 벌방을 낀 산들에는 거의 없다는, 그리고 내각 결정을 어기고 화전을 일구면서 나무를 몽땅 찍어 숯한 산을 뚫쓰게 만들어 장마때에는 사태가 나서 산 밑에 있는 밭까지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김일성의 비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 파괴는 북한 주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다락밭 건설이었다. 1976년 김일성은 알곡 증산을 위해 다락밭 만들기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수년 내에 20만 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

은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망탕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다가는 숯한 땅을 뚫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라며 1980년 자신의 지시를 번복, 다락밭 건설이 산림을 황폐화시켰음을 시인하였다. 1995년에도 북한이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를 독려했었다는 사실은 북한 산림 훼손의 실태를 반증해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북한의 공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함흥 지구의 대기 오염이다. 함흥 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도시로서 그 가운데에서 지역의 70%가 공장 지대인 함흥시 흥남 구역에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모방직공장 등에서 나오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 물질로 인해 공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9년 그는 함흥에 올 때마다 화학 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완전히 없앨 것을 강조하였으나 화학 공장들에서는 아직도 유해 가스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듬해에 또 함흥 지구의 공해 현상을 막을 것에 대한 과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기업소의 굴

뜩에서 나오는 연기가 시안의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했으나, 당 간부들이 공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음은 물론 공장과 기업소의 지배인들은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가 어떤 해를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함흥 지구의 공해 현상이 개선되기전까지 계속되고 있음은, 10년이 지난 1989년 함흥시의 공해 현상을 막으려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공해 현상을 막자고 구호나 부르면서 소극적으로 달라붙거나 공장과 기업소의 낡은 설비를 보수할 때, 헌 바지를 깎듯이 땀때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 김책제철소가 있는 제철 도시인 청진,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소가 있는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등도 대기 오염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수질 오염의 실태 역시 김일성의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공장이나 광산들에서 유독성 물질을 내려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번 강조하였으나, 아직도 유독성 물질을 강에 그냥 내려보내고 있으며 평양염색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을 그냥 대동강에 내려보내 그전에는 옥류교까지 무리를 지어 올라오던 물고기들이 지금은 만경대 앞까지 왔다가 약 냄새를 맡고 다시 바다쪽으로 내려간다. 또 황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후 대동강에서는 송

어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버렸고, 논가까이에 있는 바닷가에서는 왕새우가 논에 친 농약의 영향으로 잘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대동강 물을 음료수와 관개 용수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들과 공장 및 기업소들에서 오수를 몽땅 흘러보내 대동강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1986년 제7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대동강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36 mg/l 이고,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8.3 mg/l 라면서 대동강의 깨끗함을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면서 자랑하였다. 그러나 오수와 하수, 폐수에 의해 대동강이 오염되었음은 “평양시의 도시 경영 사업에서는 상하수도 관리 문제, 오물 처리 문제, 공해 방지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평양시 도시 경영 사업에서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1989년 김일성의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외 북한의 남양, 회령, 무산시 등과 중국의 도분시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 공장, 펄프 공장, 화학 섬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 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 역시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 시멘트 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 폐수에 의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들 산업 시설과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독성 물질

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북서태평양해양환경보존계획(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측 동해와 서해는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서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함흥과 원산만에서 가깝식 기름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였을 뿐이다.

동·식물에 대한 보호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작노루를 잡지 말라고 하였으나 보이기만 하면 잡아 번식이 되지 않는다면서 동불 보호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루나 꿩과 같은 산짐승은 새끼를 넣고 알을 낳을 때에는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하는데도 가리지 않고 붕땅 잡아 버는다고 김일성이 비판하였던 것이다.

또한, 어족들을 계획적으로 보호 증식해야 하는데 닥치는대로 잡아서 물고기 종사를 없애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다의 물고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에 있는 풀을 베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풀이 영양가가 있다느니, 그것을 섬유 원료로 쓸 수 있다느니 하면서 바다 속의 풀을 모조리 베어내 물고기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한 연설 등에서 동·식물의 남획 현상을 엿볼 수 있다.

## 북한 환경 오염·파괴의 구조적 원인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우월성,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오염과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북한식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비생태성과 북한 체제가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구조적으로 비생태적일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무슨 일을 하려들지 않았으며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자원과 생산 수단이 국가나 협동 농장의 소유가 되어 주민 각자가 여기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동기를 가지지 못했다. 또한 생산 활동에 대한 가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동기도 가지지 못하였다.

둘째, 계획 경제 체제에서 최우선 과제는 계획된 목표량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자원의 한계 속에서 운영되는 경제는 단기적으로 성장 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하였

고 여기에 대한 투자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환경 보호적 설비 마련에 대한 투자는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었고 그것이 누적되자 환경 보호적 산업 형성을 위한 구조 조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셋째,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원 특히, 에너지 분야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환경 오염을 가중시켰다.

넷째,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 체제를 표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관한 기술과 경험의 국제적인 교환에는 물론, 환경 보호 분야의 국제적인 노동 분업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립 경제 체제에서는 환경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북한 내의 자원만을 써야 함으로 환경 오염을 가중시켰다.

다섯째, 낙후된 북한의 기술 수준과 빈약한 경제력이 환경 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환경 손상에 대한 대책은 물론 그 예방에 필요한 기술력을 북한은 보유하거나 축적할 수 없었다. 또한 기술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필요한 설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여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환경 오염과 파괴를 배태한 또 다른 원인으로 북한이 국가적으로 추진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모두가 비생태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들 수 있다. 구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일반은 모두 성장 전략으로 중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공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생산 수단의 성장이 소비 수단의 성장보다 더 신속히 성장한다는 레닌의 명제로부터 '중공업 우선의 테제'를 도출하여 이를 경제 발전의 절대적 법칙으로 교리화하여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러나 중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들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신기술의 개발 도입을 통해 생산의 경제적·생태적 효율화를 동반하는 내포적 생산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단지 대량 생산에 머물면서 자원의 대량적·비효율적 소비와 생태적 파괴의 확산을 수반하는 기계화만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업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소비재를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불자와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며, 더욱 많은 산업 폐기물·폐기 가스·폐수를 양산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체제 전환 후 이들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은 물론, 중공업 중에서도 에너지, 금속, 비철금속, 비료, 군수

산업 등 공해 유발 산업에 대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환경 오염과 파괴를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 60년대 이후 추진한 4대 군사노선에 의한 군사화 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4대 군사노선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전국도의 요새화’, 정책과 상시 동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쉬새없이 반복되는 대·소규모의 군사 훈련은 토양과 생태계 등의 환경 파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였다. 또한 ‘전민민의 무장화’와 ‘전군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중금속과 화학 물질이 함유된 무기, 탄약, 기타 군수 물자들의 엄청난 생산은 또 다른 환경 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그외에 70년대에 채택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의한 다락밭 건설, 80년대에 10대 전방 목표로 추진한 구분별한 간석지 개간, 농산물 증산을 위한 화학 비료와 농약의 남용 등이 환경 손상의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환경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환경 실태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 인민들은 물론 당일꾼들과 지도일꾼들도 환경 정책의 시도·감독·통제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당은... 경제림 조성 문제를 토의하고 경제림을 많이 조성할 데 대한 방침을 내

놓았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한동안은 기름나무림 조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나 지금은 잠잠하여졌습니다. 당에서 무슨 과업을 내놓으면 처음 얼마 동안은 쫓다가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인차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일꾼들의 사업에서 큰 결함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무슨 일이든지 당에서 제기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떠들면서 하지만 얼마 안가서 쫓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제일 나쁜 버릇입니다”와 같은 김일성의 비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우월성을 그토록 강조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사회정치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환경 오염과 파괴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환경 손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그 대답 역시 김일성의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당이 공해 방지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공장과 기업소들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강에 내려보내고 있는 것은 당의 유일 사상 체제가 서지 않은 표현이며 조금이라도 애국주의 사상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고,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의 동·식물과 땅같은 것을 사랑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애국주의 정신이 부족하여 동·식물을 잘 보호하지 않고 나무를 되는 대로 찍어다 물을 때며 수산 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사업도 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해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은 단

순한 기술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사업이라며 공해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에 무관심한 현상들과 강한 사상 투쟁을 벌려야 하겠다는 등의 김일성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주민들 내에 애국주의 사상의식이 결여된 것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 체제나 김일성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과 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육의 강화가 환경 정책의 첫째가는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 결과, 고단한 물질 생활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정신 생활마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 북한의 환경 정책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사회 전반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북한의 환경 정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북한 환경 정책의 제1기는 해방 이후부터 70년대의 「토지법」(1977)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 정책은 환경 문제에 눈을 뜨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에 대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의 인식 분야는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 발전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 수립을 본격화하지는 않은 시기이다. 해방 직후에는 특히 일제 식민지 통치 결과 황폐화된 산림의 조성에 의한 홍수 피해 방지와 그나마 남은 산림에 대한 남벌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재미있는 것은 김일성이 금강산의 풍치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면서 산에 있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게 하며 바위 같은 데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후대들에게 불러줄 좋은 구호를 바위에 새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한 사실이다. 북한의 명산 요소에 절경의 바위가 정치적 구호로 수난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전쟁 이후부터 60년대 사회주의 건설 도입의 시기에 북한은 그들의 건설 목표와 관련하여 환경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임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조 섬유의 원료가 되는 목재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 자원의 조성하고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을 이용한 과수원을 늘리는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해방 직후부터 근 20년간 추진하였던 산림 조성하고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고 산림을 남벌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자 이것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넷째, 사회주의 건설에 따라 환경 오염과 파괴가 늘어가는 국토 관리 사업과 국토 건설 계획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할 것을 추진하였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공업화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결과 토지, 강, 하천, 항만, 호소 등의 오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공해 현상과 유독성 물질의 강, 하천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고,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 내에 유일 사상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사상 사업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그때까지 국토 개발 상에 빚었던 잘못과 그로 인한 환경 파괴를 시정하면서 절대 경지 면적의 확장과 강하천 유역의 개발,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절대 경지 면적의 무절제한 이용과 낭비 방지를 추진하기 위해 1976년에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채택하였으며, 그것을 이듬해 「토지법」의 채택을 통해 법제화하였다.

「토지법」에는 국토 건설 총계획에 따라 국토 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정리·개발·보호·개간 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 조성의 방향과 산림의 보호·이용 대책, 동·식물의 보호 대책,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 수산 자원 보호 대책, 공해 현상 방지 대책 등

을 규정하였다.

한편, 해양 자원을 보전 관리하고 개발 이용하며 해양 오염을 금지한 「경제 수역에 관한 법령」(1977)과 「경제 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 선박 및 외국 항공기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정」(1978) 등은 북한이 70년대 말에 이르러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회와 자연 전반과 관련하여 환경 정책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 70년대는 북한의 환경 문제 인식과 그 대책이 본격화되는 제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북한 환경 정책의 제2기는 「환경보호법」(1986년)이 채택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북한이 환경 문제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환경 보호에서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요구한 시기이다. 또한 국토 관리의 감독과 통제의 수단으로 법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 이 시기 환경 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4년 김정일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른 국토 관리 사업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국토 관리 설계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구하였다.

과학화의 요구는 이제껏 국토 관리 사업의

일부로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 운동적 환경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환경 오염 방지 운동은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사후 대책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 관리의 개선 강화를 위해 김정일은 국토 관리 규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등 사상 교육 활동의 강화를 재삼 강조하였다.

김정일의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 요구, 제안 등이 법제화되어 정식화된 것이 「환경보호법」이다. 순 5장 52조로 구성된 동법은 우선 제1장에서 환경 보호 원칙으로 환경 보호 관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할 것, 그것을 위해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끊임 없이 현대화할 것, 국가는 과학 연구 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 무엇보다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 무기의 개발과 실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의 보존과 조성, 오염 방지에 관한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 관리 규정에서는 환경 보호 사업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되나 그 실무를 위해 정무원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 환경 보호에 대한 감독 사업은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 및 제재의 규정에는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킨 사람이나 단체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북한의 영토와 경제 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 해를 끼친 사람 또는 배는 역류하여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90년대 북한 환경 정책의 특색은 첫째, 1992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과 둘째, 합영법의 연장선 상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 보호 대책을 세우며 자연 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생활 환경과 노동 조건을 지어준다”고 규정하여 북한이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을 국내

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국외로부터의 환경 관련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한 합영법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북한

은 1992년의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시행세칙」, 1993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토지임대법」, 그리고 1994년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 등에 환경 오염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표> 참조).

(표) 환경 보호 관련 외국인 투자 관련 법 규정

구 분	법 령	일 시	내 용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민족 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 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제11조)
	합영법 시행 세칙	1992. 10. 16. 정무원 결정 제14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음(제5조)
	자유경제 무역 지대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가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제13조)
	토지 임대법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 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제10조), 환경 보호, 위생 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제5항)
	외국인 기업법 시행 규정	1994. 3. 27. 정무원 결정 제13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음(제9조), 국민들의 건강 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제2항)
	자유무역항 규정	1994. 3. 27. 정무원 결정 제13호	항 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제24조), 항사 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제25조),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000 원까지의 벌금(제3항),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 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 원까지의 벌금(제4항),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 오염을 시켰거나 화재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 원까지의 벌금(제5항)

이를 통해 북한은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관련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1995년 11월 정부원의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환경보호법 시행 규정」은 총 5장 55조로서 환경 보호 사업의 일반적 원칙, 자연 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 오염 방지 문제,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 관리,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환경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망

북한 체제에 의한 환경 오염과 파괴가 없는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이 그 체제의 수령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와 북한 환경 실태의 현 주소이다. 북한 주민들은 그 선전되는 허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동원되고 통제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의 정신과 교시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 김정일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가 남북한 주민과 그 후세들이 살아 가야 할 공통의 삶의 터전이고 남북한 모두에게 환경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인식한다면, 한반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공동 협력은 상호 공통의 삶

의 장을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분야이다. 남북한간에 내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는 상호 공동 협력을 통한 접근 가능성이 큰 교류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70년대부터 시작하여 80년대에 이르러 환경 문제가 사회 전반적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도 이미 시인한 바와 같이 환경 보호가 대중적 운동으로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벗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과학화·기술화·현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 및 과학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이 북한 자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북경의 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양 오염의 감시와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이를 반증해준다.

셋째, 환경 문제의 국제성을 들 수 있다. 한반도의 대기, 강, 하천 및 해양 오염이 남한에만 피해를 주고 북한을 피해갈 수는 없다. 또한, 동해에 폐기된 구소련·러시아의 핵물질이 남한에만 해를 미치고 북한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을 초월한 문제이다.

넷째,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은 '제로섬(Zero-Sum)' 이 아닌 '비제로섬(Non Zero-Sum)' 분야이다. 국가간의 군비 축소나 경제 의존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이기심에 의한 공정치 못한 행태로 어느 일방이 타방에 비해 보다 큰 이익(손실)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 해가 될 수 없는 분야이다.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이념과 체제간 이질성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성이 큰 장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분야와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선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경제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 최근 발표된 북한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이 공동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지구환경 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반도 내 환경 오염 감시를 목적으로 한 공동 협력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 내외의 대기 오염 측정과 감시 활동, 바람, 비, 강물 등을 통해 오염 원천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 활동, 수질에 대한 공동 측정 및 감시 활동, 한반도 주변 해양 환경의 감시 활동,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측정과 감시 활동, 멸종해가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 활동 등이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둘째, 환경 보호적 생산 설비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공동 연구이다. 생산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줄이면서 원료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그 사회의 기술 발전 수준에 비례한다.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폐열 등을 이용하는 원료의 종합적 이용, 폐기물을 2차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 및 제품 설계, 폐기물 회수 이용 기술 등과 같은 환경 보호적인 생산 기술의 개발이 공동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자연 재해에 관한 공동 연구로서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한 예보, 예방 및 조직적인 대책 수립의 분야이다. 자연 재해는 돌발성, 지역성, 반복성, 주기성을 가지므로 여기에 관한 정보 교환 - 재해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 재해 방지 기술 등을 통해 발생 원인, 주요 특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환경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환경 자원에 관한 공동 연구로서 남북한이 개별적 자원을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자원 체계를 공동

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자원 체계라 함은 자원 자체 혹은 주요 자원과 이 자원을 전환하여 최종 생산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설비, 기술, 운송 수단, 정보 등을 의미하는 보조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 자원 체계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 체계 및 환경 체계와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 자원에 대한 양·질적 측면에서 장단기적인 수요 전망 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특히, 지열, 풍력, 태양열, 파도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그외에 비무장 지대의 생태계 조사, 동해의 구소련·러시아의 방사성 물질 투기에 대한 오염 조사,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이동성 대기 오염 및 황사 현상에 대한 조사 등도 공동 협력의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은 쌍방의 직접 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기 전에는 쌍방만의 대화보다는 기타 관련 국가가 포함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대화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이 회원국인 NOWPAP이나 기타 환경 보호 관련 국제 기구가 대화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류와 협력의 추진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협상단보다는 기술 전문가, 관련 학자들에 의한 남북한간 실무적 접촉을 국제 기구의 지원 아래 선행하여 이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대표단간의 협상에 앞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 실태에 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공동 조사시에는 관련 국제 기구의 파견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작업이 진행된 후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인센티브 등 교류와 협력의 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진행한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이 'Win-Lose' 게임이 아닌 'Win-Win' 게임임을 깨닫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때, 이념에 의한 대립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기에 아직도 냉전이 온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최소한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統**